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 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사 : 박숙미(socialworker@welfare.net)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신설 확대되는 읍면동사무소 내 주민생활 지원팀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계는 물론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6일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들은 복지 고용 보육 주거서비스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 하나만 방문하여도 관련 서비스 또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받게 될 예정이며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계획'을 7월 1일부터 1단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복지, 고용, 여성, 주거복지, 문화

등 시군구 본청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조직을 통합하여 하나의 (가칭)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고 주민생활지원부서의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 강화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보강할 예정이다. 또 읍면동사무소의 사무 중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되 읍면동사무소에 복지 등 주민생활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하고 본청으로 이관되는 기능에 배치되었던 행정직 인력을 주민생활지원기능으로 전환배치할 예정이다.

이어 행정자치부는 4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의 종로구, 중랑구, 송파구 등 9개 자치구를 비롯하여 시군구 46개 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이 지역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개편작업을 6월 중순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위주 조직 개편하면서 담당은 행정직 위주로 조정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자치부가 사회복지관련 기관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 까지 반발을 사고 있다.

이유는 대대적인 조직정비 때문인데 각 구청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복지, 고용, 여성·보육,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기구와 인력을 통합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해 구 본청에는 3~4개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의 주무과인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도록 하였다.

또 일반 행정과 민원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사무소에 주민생활 지원담당을 신설하고 현장방문, 심층상담, 정보제공, 관련기관 의뢰·연결 등 현장성·접근성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초단체들 중 상당수가 6급 담당을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 모두 근무할 수 있는 복수직으로 인사안을 만들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중구 등 8개 구 98개 동에서 주민생활지원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데 이중 사회복지직이 6급 담당을 맡는 경우는

17곳에 불과하지만 복수직의 경우 53곳이나 된다. 따라서 각 구청은 구청과 동사무소에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여명이 늘어나는 6급 담당을 한두자리만 전문직(사회복지직) 단수로, 서너 자리 정도를 복수(행정+사회복지)로 배정하고 대다수는 행정직으로 직렬과 직급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또 개편과정에서 기존 일반행정 또는 민원 인력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전환배치함으로써 주민생활지원담당의 서무·행정기능, 유관 기관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성명서 내고 반발

인천사회복지보건의연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평화와참여로기는 인천연대는 5월 10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전달체계 개편의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고 전문성을 갖춘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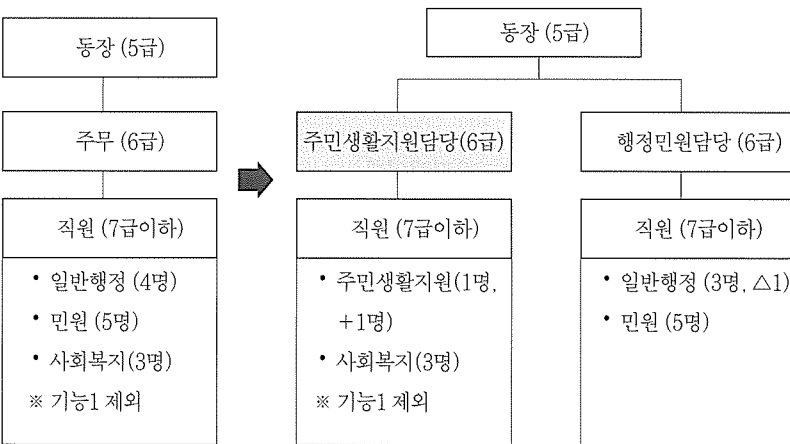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하여 "7년 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동사무소가 획기적 전환기를 맞고 있으나 각 구청은 복지는 외면한 채 공무원들의 승진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주민은 없고 공무원만 있는 꼴"이라고 비난하였다.

또 "정부의 지침에서도 행정직과 사회복지직간 주민생활지원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사무분장으로 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배제할 경우 주민복지문화센터의 실패는 자명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조직진단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행정직 위주 승진·조직개편을 전문직(사회복지) 공무원과 함께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의 승진자리다툼이 아닌 최소한의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조직이 만들어져야 함은 상식인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전국 16개 지방협회도 5월 19일 성명서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행정조직개편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행정직은 서무와 행정기능, 각종증명서·서류발급, 유관기관 자료제공 연결·협조 등의 업무를, 사회복지직은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접수, 현장방문, 종합적인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표 -1〉 동사무소 개편 예시 (인력 15명 동, 복지직 3명)



〈표 -2〉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의 인력간 사무분장

사회복지직	행정직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상담 접수 현장방문, 사후관리 종합적인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조정 기타 현장 대면업무 등	주민생활지원담당 서무 행정기능 각종 증명서 서류 발급 유관기관 자료제공 등 협조 관련기관 의뢰 연결 등

“ 정부의 주민통합서비스 실현 방안은 최근 사회복지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는 인정될 수 있으나 보건과 복지의 통합도 시범사업에서 실패한 경험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생활체육을 행정적으로 통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안이하고 지극히 비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실정에 맞게 분담하도록 하였다. 이는 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행정직공무원을 일부 투입하여 부족한 복지인력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중앙정부는 이와 같이 행정조직을 주민생활지원기능으로 개편하도록 했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직공무원들의 승진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조직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시군구청이 복지위주의 업무 기능으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면서도 그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들을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 위주로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현재 각 시군구청이 추진 중에 있는 행정직 위주의 승진 조직개편을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함께 하는 조직이 되도록 최소한 신설되는

구청 사회복지전담부서와 임대아파트와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는 전문직공무원(사회복지직)이 담당(6급)이 되어야 한다고 반발하였다.

이러한 반발움직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개선추진단 주낙영 팀장은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하여 “복지, 환경, 문화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의 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증원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우선 기존 인력을 활용해 보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객관적인 인력진단을 통해 늘이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로 전환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복지영역 이외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려는 비현실적인 접근

복지인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의 사회복지사 394명에게 물어보았다. 정부의 ‘동사무소를 맞춤 복

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복지문화센터로 개편하겠다’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4%가 기존 사회복지기관의 역할과 중복되는 전달체계라고 생각하였으며 12%는 거시적으로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답하여 66%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33%는 복지서비스 확대의 바람직한

〈그림〉 정부의 ‘동사무소를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복지문화센터로 개편하겠다’는 정책에 대한 의견은?

기존 사회복지기관의 역할과 중복되는 전달체계	=====	54% (215명)
거시적으로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	====	12% (46명)
복지서비스 확대의 바람직한 정책이 될 것	=====	33% (130명)
기타	:	1% (3명)

정책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위의 설문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사들은 현행 개편이 기존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접수, 현장방문, 종합적인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과 중복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강석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부장은 정부의 주민통합서비스 실현 방안은 최근 사회복지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는 인정될 수 있으나 보건과 복지의 통합도 시범사업에서 실패한 경험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생활체육을 행정적으로 통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안이하고 지극히 비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김강석 부장은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문제를 단순히 행정조직의 개편으로 접근하려는 것으로 실제로 지역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를 포함한 빈곤계층과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일


만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역복지관에서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효율화의 노력은 전혀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집행, 평가하는 일도 중요한 사회복지

이용교 교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하여 복지인마을(www.welfare.net)을 통하여 “이번 행정 개편이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훼손하거나 오히려 사회복지 업무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한다. 또 “기존 사회복지인력도 읍면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시군구와 시도에 배치시켜서 복지공동체를 기획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복지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복지이지만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일도 중요한 사회복지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것은 적절한 조치에 분명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 사회복지가, 사회복지사들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면 이는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그 업무 내용이 다를 지라도 사회복지직의 업무를 우선 기존 인력을 활용해 보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객관적인 인력진단을 통해 늘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운영이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도입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인사개편이 이루어져 기반을 튼튼히 잡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업무라는 것이 일정시간의 교육훈련을 통해서 강화되는 전문성이라면 행정 체계에서의 사회복지 전문성은 훼손될 것이다. 

또 다른 공공전달체계 개편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김강석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부장

최근 사회복지관련 정책들이 외양적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체계가 공고히 되는 모양새를 갖추곤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자인 지역주민도, 민간사회복지서비스공급자인 사회복지기관들도 아직 그 중심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최근 정부는 2004년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이 IMF 경제위기 이전인 97년보다 3.5배가 상승하여 복지비용지출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그리 높지 못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새로운 주민통합서비스를 구축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주민통합서비스 또한 공급자 중심의 공공전달체계의 개편이며 또 하나의 행정기구일 뿐 그 속에서 어떻게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지,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공공과 민간이 네트워크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나 실행안은 담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었다.

또한 제대로 시행조차 해보지 않았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무시한채 또 다른 행정기구만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에 상당한 불안감을 기질 수밖에 없었고 협의체의 진행방향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걱정의 소리가 많은 실정이다.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이른바 민간의 지역사회복지기관들은 이미 그 역사속에서 관계기관들, 기업복지재단, 공동모금회, 종교계, 자원봉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민간자원을 극대화하여 정부사업을 대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기관들은 현재 자율적인 민간조직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공공과 연계가 되지 않아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공공영역에서도 서비스 분야별 중앙정부의 전달체계의 혼선으로 수요자 측면에서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분절되는 문제를 겪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단위로 새로운 거버넌스의 틀을 구축하는 복지영역의 틀걸이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사회공동체가 형성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해법도 찾기 전에 희망 21을 통해 또 다른 전달체계를 논하고 있으니, 사회복지현장을 이것저것 해봐도 되는 실험실로 착각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문제는 실행기구가 없는 자문 및 협의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고, 실질적인 민과 관의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제대로 기능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연구에서 실행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즉 회의와 협의, 자문의 기능뿐 아니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합의된 영역과 과제에 대해 수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두어야 하고, 그 사업을 주도할 실행기구를 두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운영 조례안과 기존의 협의체 시범사업지역사례, 민관의 수평적 의사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한 논의 등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함께 연구되고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